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지난 8월 30일 박재완 신임 고용노동 장관이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에서 박재완 신임 장관은 '역동적인 노동시장' 과 '법치와 자치에 기초한 상생의 노사관계' 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망도 한층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정부의 안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상생의 노사문화가 개별 사업주와 노조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책임까지 실천하는 차원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4년간 10대 건설사에서 산재로 154명 사망

최근 4년간(2007~2010.6) 국내 10대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1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10대 건설회사 현장 사망자 발생현황(2007~2010.6)' 자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최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업체(대한건설협회 기준) 현장에서는 141건의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5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또 자료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10대 건설사의 사망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38건이었던 사망재해는 2009년 50건으로 24%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도 2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또한 2007년 45명에서 2009년 56명으로 19.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는 21명이었다.

특히 이번 자료 분석 결과 10대 건설사 중 H건설·D건설 등 시공능력 1·2위를 다투는 대형건설사가 사망재해에서도 1·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H건설·D건설에서만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1건(36.2%)의 중대재해가 나 58명(37.7%)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현장 안전교육을 내실화 하는 한편 사고 발생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고강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재해 연평균 6000건 발생 '맞춤형 대응책 필요'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한 맞춤형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2005~ 2010년 6월) 공무원 재해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으로 인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 청구하는 재해급여 청구 건수는 연평균 6,000건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단, 사망·장애에 이르는 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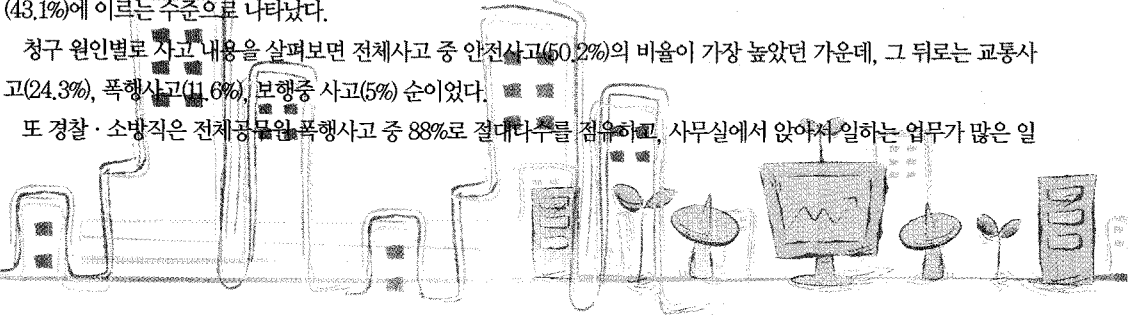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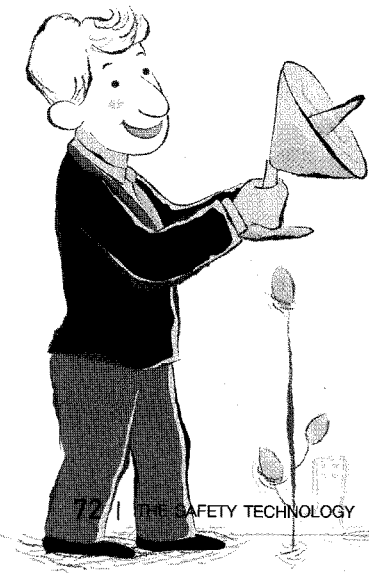
이 기간 동안 공무원 재해발생률은 05년 0.5%, 06년 0.46%, 07년 0.46%, 08년 0.48%, 09년 0.48% 등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현장의 산재율(0.71~0.77%)에 비해 크게 낮게 기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기관 치료를 위한 요양신청 청구(89.9%)가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장해급여 6%, 유족보상금 4.1% 등의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30~40대 비율이 66.8%로 높게 기록됐고, 직종별로는 경찰·소방직이 전체 재해급여 청구의 절반(43.1%)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구 원인별로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사고 중 안전사고(50.2%)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가운데, 그 뒤로는 교통사고(24.3%), 폭행사고(11.6%), 보행중 사고(5%) 순이었다.

또 경찰·소방직은 전체공무원폭행사고 중 88%로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업무가 많은 일



반직은 전체공무원 내과질환의 4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재해의 종류가 직종별 직무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어, 직종별 취약재해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질환별 재해급여 청구건수를 보면 연평균 840건(14%)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대폭 감소추세(05년 1,133명→09년 621명)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휴가사용 권장, 근무환경 개선,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그동안 질병발생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통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공무상 재해를 10%이상 저감할 경우 연간 약 500여명의 사고가 줄어들고 약 5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라며 “앞으로 직종별 취약재해에 대한 교육·홍보, 재해감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등 맞춤형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상반기 안전관리 위탁 재해율 '0.16%'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상반기동안 안전관리 위탁업무로 관리했던 근로자들의 재해율이 전체 산업현장 평균재해율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동안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안전관리사업으로 관리했던 근로자수는 총 582,339명이었으며, 이 중 재해자는 937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산업현장의 재해율이 0.33%이고,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재해율은 0.39%였는데, 협회에서 관리했던 사업장들의 재해율은 이보다 크게 낮은 0.16%로 기록됐다.

분야별로 보면 대형사업의 경우 547,887명의 근로자 중 839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0.15%의 재해율을 기록했으며, 기술지도의 경우 34,452명 중 98명의 재해로 0.28%의 재해율을 나타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0.29%(근로자수 80,933명, 재해자수 234명), 50~99인 0.17%(257,352명, 437명), 100~199인 0.12%(171,599명, 207명), 200인 이상 0.08%(72,455명, 6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에 대해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예상대로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장의 재해율도 높게 기록됐다”라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은 05년 0.77%, 06년 0.77%, 07년 0.72%, 08년 0.71%, 09년 0.7% 등으로 0.7%대에서 머물러 있지만, 협회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평균재해율은 05년 0.39%, 06년 0.43%, 07년 0.4%, 08년 0.48%, 09년 0.46% 등으로 매년 0.3~0.4%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자동차산업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 결성

국내 5대 완성차 업체와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그룹을 결성하고 공동노력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대 자동차업체 11개 공장 대표 등은 9월 9일 대전 유성구 소재 유성호텔에서 '자동차산업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 발대식을 갖고, 이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5대 자동차 업체는 기아자동차(광주, 소하리, 화성공장),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아산, 울산, 전주공장), GM대우(군산, 창원, 부평공장) 등으로, 이들 11개 공장의 대표들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자동차산업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을 결성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문도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수준 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자동차 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산업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은 안전부서장과 고용노동부 및 공단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실무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재해예방 대책과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국내 자동차 업체의 산업재해자는 지난해 7,251명 등 연간 7천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해율은 2009년 기준 1.32%로 전체 산업의 평균 재해율(0.7%)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총 4,508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4,098명) 대비로 41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럭적재식 기중기도 고속도로 주행 가능

앞으로는 기중기도 트럭적재식인 경우에 한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에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트럭적재식 기중기는 일반 카고(cargo) 트럭의 적재함에 기중기를 장착한 형식으로, 일반 카고트럭과 동일한 주행성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에는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했었다.

현행 법령상 고속국도의 통행이 허용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트럭적재식) 등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트럭적재식 기중기의 장거리 이동이 손쉬워짐에 따라 건설 관련 업계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한편, 필요시 고속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기중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

